



퇴직금누진제 폐지·임금피크제 강요·승진 적체에 맞선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최근 기재부장관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과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임금피크제 도입 압박도 거세다. IMF 위기 이래로 호시탐탐 시도돼 온 개악을 부채 감소 압박 속에 다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임금피크제는 미래 임금에 대한 공격이고, 노동자들의 말처럼 “이런 임금 삭감을 가만히 앉아 받아들이기 바보는 없다”.

자녀들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복지도 매우 적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는 노동자들에게 불안한 노후에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자, 비빌 언덕이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지금도 “자녀 대학 학자금을 대고 나면 퇴직금이 마이너스”라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많다.

따라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강탈하는 중대한 공격이다.

정부는 IMF 이후 공공기관에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이 민간기업과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절반가량이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공무원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공기업 노동자들보다 30퍼센트 가량 상회하는 퇴직금을 받고 있었다.

즉, 퇴직금누진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10월 11일 2013 임단투 승리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총회.

었다. 경제 위기에 아무 책임 없는 노동자들에게 내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폐쇄’ 취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누진제로 받는 퇴직금은 노동자들이 차세대 노동력을 양육하거나 질병과 노후 보장을 고려해 현재의 임금 일부를 미래에 대신 받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 대법원도 ‘후불 임금’의 성격을 인정해 왔다.

서울 지하철 부채가 퇴직금누진제 탓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서울메트로 영업 적자의 주요 부분은 무임수송비용과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다. 이것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착한 적자’이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적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한 마당에, 애먼 노동자 퇴직금을 공격하

는 것은 속죄양 삼기일 뿐이다.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금누진제라는 ‘특혜’를 버린 것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민간기업도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해, 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길을 열어 줬을 뿐이다.

따라서 지난해 서울지하철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고, 누진제 폐지를 합의한 전임 위원장을 날린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새 민주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누진제 폐지 거부 의사와 열망을 온전히 받아안고 가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입사자들에게도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해 단결을 도모해야 했다.(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레프트21> 115호의 관련 기사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을 읽어 보세요.)

정년연장과 승진 적체 해소라는 숙원도 해결돼야 한다. 특히, 정년 60세 환원은 임금 개악 동반 없이 이뤄져야 한다.

IMF 직후 정부의 압박과 배일도 집행부의 배신적 합의 때문에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정년 단축을 쓰디쓴 심정으로 한시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에도 정년 환원 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정년이 60세인 공무원과 다른 지역 지하철노동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 뒷면으로 이어짐

나누고 싶은 투쟁 소식과 의견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레프트21>의 관련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민을 담고, 노동자 운동의 뜨거운 쟁점을 회피하지 않는 신문
- 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신문 - 국제운동의 동향과 교훈을 전하는 신문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http://www.left21.com>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고,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는 압박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2.8퍼센트로 제한하더니, 이제 노동조합 권리마저 박탈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은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이명박 정부 때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백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재정 위기가 다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자들은 지금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려고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에서도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들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악화뿐 아니라 전기·상수도·가스·고속도로·철도 요금 인상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어제부터 인상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보수 언론은 “철밥통”, “신의 직장”이란 자극적 표현을 쓰며 공공부문 노동자들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기업 금고 채워 주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대기업·부자를 살리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기업 요금 지원, 해외 자원 개발 등에 공공기관들을 대규모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4대

강 ‘삼질’이 대표적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00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적자 9조 6천억 원 등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 적자만큼 10년 동안 대기업에게 할인 가격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해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자를 메우려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금고에 채워 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뿐 아니라 국가부채의 증가도 상당 부분은 대기업들을 위해 환율·물가 안정에 쓴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채든 국가부채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그 밖의 다른 노동자들은 득 본 것이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다. 오히려 각종 특혜와 감세를 누린 재벌들과, 또한 이제 와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협조”한 박근혜에게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지키려 싸우는 것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10월 26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임금·노동조건 후퇴 압박하는 박원순 시장

개혁 염원을 업고 당선한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지난 12년 동안 당신들만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양보할 때가 됐다”며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맞바꾸라고도 강요하고 있다. 구조조정 컨설팅 업체로 악명 높은 맥킨지에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서



울시 부채를 줄인다면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두 지하철공사 통합안도 고려 중이다.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순직도 1인 승무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누진제 폐지의 경우, IMF 이후 15년 동안이나 시도됐지만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개악이다. 그런데 정작 개혁파를 자처하는 인물이 등장해 이를 처리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파나 개혁파나 집권하면 똑같다’는 환멸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 운동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앞면에서 이어짐

들이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수명이 연장돼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정년연장이 임금 삭감을 동반해서도 안 된다.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필요에도 맞지 않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우리운동의 중요한 요구를 훼손시킨다.

또,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 노동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해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민주노총) 최근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분노와 변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년 연

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맞바꾼 정년수 집행부에 엄청나게 분노하며 우파 위원장을 날리고 오랜만에 민주파 집행부를 세웠다. 이런 변화 속에 올해 임단투를 시작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에 잘 맞서 싸운다면 재정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파상 공세에 맞서 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실제로 다른 서울시 공기업들도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까닭이다.

물론, 정부와 서울시가 워낙 강경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사용자들이 순순히 양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해야만 노동조건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내 활동가들은 퇴직금 같은 평조합원들의 핵심 불만을 충실히 대변해 투쟁하고자 애써야 한다.